

상법 보험편 개정 법률 해설

2015. 3. 12. 시행

변호사 박기억

1. 법률개정 연혁

- 📅 1991. 12. 31. 상법 보험편 개정(23년 전)
- 📅 2007. 8.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2008. 1. 국회에 제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 📅 2011. 2.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발족
- 📅 2014. 2. 20. 국회 본회의 통과
- 📅 2014. 3. 11. 공포!
- 📅 2015. 3. 12. 시행 (공포일로부터 1년 후)

2. 법률안의 제안이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함.

3. 주요내용

가.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에 대

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안 제638조의3)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p>第638條의3(保險約款의 교부·명시義務)</p> <p>①保險者는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 保險契約者에게 保險約款을 교부하고 그 約款의 중요한 내용을 <u>알려주어야 한다</u>.</p> <p>②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날부터 <u>1月내에</u>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p> | <p>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p> <p>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u>설명하여야 한다</u>.</p> <p>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u>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u>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

- 1) 현재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취소권 행사가 어려움.
-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함.

👉 보험약관상의 계약취소 제도를 그대로 입법화함.

👉 보험약관상 ‘계약취소’ [생명보험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제3조 제2항]¹⁾ : 보험자가 약관 및 청약서 부분 미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설명, 계약자가 청약시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기산점 변경]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개월[2007년 개정안], “보험증권을 받

1)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조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 날”부터 3개월[2008년 개정안],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최종안)로 변경!

👉 취소권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도 설명 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 **취소권 불행사시 약관의 효력** : 당초 2007년 개정안에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약관의 효력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안(2안)이 채택됨. 보험계약자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어 나중에 이를 삭제함.

👉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보험업법 개정법률 제102조의 4로 신설²⁾) : 2014. 7. 15. 시행)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청약철회 가능

👉 **보험약관상 ‘청약철회’** : 보험약관에서 인정된 제도(각 보험약관 제2조).³⁾ 아무런 사유 없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단체계약,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제외). 통신판매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도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다만, 약관규제법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문 | 2007년 공고안 | 2008년 개정안 |
|---------------|-----------------|-----------------|
| 제638조의3(保險約款의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 |

2) 보험업법 제102조의4(청약철회)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이 절에서 "청약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 2014.7.15] 제102조의4

3)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조(청약의 철회)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
|--|--|---|
| 교부·명시義務) ①保險者는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 保險契約者에게 保險約款을 교부하고 그 約款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부·설명의무) ①----- ----- ----- ----- ----- 설명하여야 --- -. | 부·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 ②保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이 成立한 날부터 1月내에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 보험 증권을 받은 ----- ----- ----- . 보험계약 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 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계약관계는 그 보험약관 의 규정에 따른다. |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u>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u>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조의2 신설) [★★]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신 설> | <p>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p> <p>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p> |

| | |
|--|----------------------------|
| |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
|--|----------------------------|

- 1) 현재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함.

👤 제목이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대리상’으로 변경됨. ‘보험대리상’이라는 명칭 처음 사용.

👤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상법 제87조). 대리상에는 통지의무(상법 제88조), 통지를 받을 권한(상법 제90조) 있음.

👤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 상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현재 실무관행은 대리점에게는 상품 설명이나 청약서 작성까지만 위임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다 진행하는데, 개정법률처럼 그 외의 권한까지 인정한 것은 보험대리점을 상법상 ‘대리상’의 일종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음.

👤 대법원은 ‘보험대리인’이 위험증가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인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⁴⁾

보험설계사에 관한 사례에서는 대부분 부인함.

📌 2007년 공고안에는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도 있었음. 그 이후에는 보험설계사의 권한 부분은 삭제됨.


| 2007년 공고안 | 2008년 개정안 |
|---|---|
| <p>제646조의2(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 ①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이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의 권한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수여한 보험대리점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p>②보험설계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자 명의의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p>③제1항과 제2항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 <p>제646조의2(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점과의 대리계약에서 보험대리점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대리계약상의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③ 보험대리점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p> <p>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


다.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안 제662조) [★★★]

-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第662條(消滅時效) 保險金額의 請求權과 保險料 또는 積立金の 返還請求權은 2年間, 保險料의 請求權은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 3)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적용시기 및 범위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1항). 제662조의 개정 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4항). 이 법은 2015. 3. 12.부터 시행!

 자배법 소정의 책임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는 이미 3년으로 개정됨(2007. 5. 17. 개정).

라.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제682조)

| 현행 법령 | 개정 법률 |
|---|---|
| 第682條(第三者에 對한 保險代位) 損害가 第三者의 行爲로 因하여 생긴 境遇에 保險金額을 支給한 保險者는 그 支給한 金額의 限度에서 그 第三者에 對한 保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 |

| | |
|---|--|
| <p>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保險者가 補償할 保險金額의 一部를 支給한 때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p> | <p>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u>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

- 1) 현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함.
-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임.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마.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제722조)

| 현행 법률 | 개정 법률 |
|-------|-------|
|-------|-------|

| | |
|--|--|
| 第722條(被保險者の 事故通知義務) 被保險者が 第三者로부터 賠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者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현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음.
 -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이 법에 따른 보험사고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3)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자의 이익 간에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제722조)는 사고발생 통지의무(제657조)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면서 위 개정 조문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음.
- 📌 즉 사고발생 시기와 배상청구 시기가 다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임. 피해자가 많을 경우 보험자는 추가되는 피해자를 알 수 없어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임. 그러나 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를 탐지해야 할 의무는 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바.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 <신 설> | 제7절 보증보험 |
|-------|--|
| <신 설> |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 <신 설> | 제726조의6(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신 설> |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 현재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의 성질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 2)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둬.
- 3) 보증보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둬으로써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 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 상법 제659조 제1항(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보험자 면책) 적용[원칙적 소극](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제한(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⁵⁾

사.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第727條(人保險者의 責任) 人保險契約의 保險者는 生命 또는 身體에 關하여 保險事故가 生길 境遇에 保險契約의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金額 其他의 給與를 할 責任이 있다. |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
| <신 설> |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第730條(生命保險者의 責任) 生命保險契約의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生命에 關한 保險事故 가 生길 境遇에 約定한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있다. |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 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
| 第735條(養老保險) 被保險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의 發生없이 保險期間이 終了한 때에도 保險金額을 支給할 것을 約定할 수 있다. | <삭 제> |
| 第735條의2(年金保險) 生命保險契約의 | <삭 제> |

5)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 | |
|--|--|
| 保險者は 被保險者の 生命에 관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保險金額을 年金으로 分割하여 支給 할 수 있다. | |
|--|--|

- 1)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의 근거 조항으로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2)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人保險)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은 삭제함.

아.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단서 신설)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단서 신설> | 第732條(15歲未滿者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 ----- ----- 단 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2) 심신박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3)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013. 12. 12. 정부안 수정시안 검토의견]

| 현행 | 개정안 | 검토의견 |
|---|---|---|
| 第732條(15歲未滿者 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단서 신설> | 제732조(15歲未滿者 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 ----- -----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32조(15歲未滿者 等에 對한 契約의 禁止) --- ----- -----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법무부 검토의견 :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 삭제 및 의사능력의 “확인” 추가

- 일부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을 명문화하여 부당 가입거절 등 정신장애인의 불이익 방지
- 다만,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 부분은 삭제
-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학설, 판례의 축적으로 해결 가능

자.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第732條의2(重過失로 인한 保險事故)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에는 事故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 |

| | |
|----------------------------------|--|
| 保險者は 保險金額을 支給 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 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 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

1) 현재 생명보험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
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
정되어 있지 않함.

2)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보험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와 유효이지만 고의로 살해한 경우는 구별해야!

👉 대법원은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
한 생명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도 부정한 사
례 있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⁶⁾ 당초에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지만 나중에 그런 목적이 생겨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법
률에 따라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 서울고법 1985. 11. 7. 선고 85나1266 판결 : “상속인 중 1인인 처가 피보험자
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따라, 살해자인 처를 제외하고 그 자녀
들에게는 각 지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차.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제735조의3 제3항 신설)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第735條의3(團體保險) ①·② (생 략) | 第735條의3(團體保險)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 는 그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 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

6)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
효)[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 | <u>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u> |
|--|-------------------------------|

- 1)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2)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 하는 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3)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이익과 더불어 단체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 경우의 보험금의 처리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은**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②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소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소외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겠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등 참조).

👤 **실 사례 소개 :**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시 가족이 급한 마음에 손해사정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 : 60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건 - 1심은 합의대로 판결-조정으로 회부되어 결국 55:45로 합의!

[2013. 12. 12. 정부안 수정 시안]

| 현행 | 개정안 | 검토의견 |
|----|-----|------|
|----|-----|------|

| | | |
|--|--|--|
| <p>第735條의3(團體保險) ①團體가 規約에 따라 構成員의 전부 또는 일부를 被保險者로 하는 生命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第731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p> <p>② (생 략)</p> <p><신 설></p> | <p>제735조의3(團體保險)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p>제735조의3(團體保險)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그 법정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

카. 질병보험 규정 신설[안 제739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신 설> | 제4절 질병보험 |
| <신 설> |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신 설> |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 그 법적 규율에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2)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 등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됨.

타.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제655조)

| 현행 조문 | 개정 법률 |
|---|--|
| 第655條(契約解止와 保險金額請求權) 保險事故가 發生한 後에도 保險者가 第650條, 第651條, 第652條와 第653條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고 이미 支給한 保險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u>그러나</u> 告知義務에 違反한 事實 또는 危險의 顯著한 變更이나 增加된 事實이 保險事故의 發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 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u>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u> . |

- 🟡 제655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해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의견 대립 있었음.
- 🟡 2007년 공고안 및 2008년 개정안 : 「제655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로 한다.」는 것임.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는 삭제됨.
- 🟡 개정 법률에 따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여전히 해석상 문제될 것으로 보임. 특히 맨 처음 개정안에 있었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의 문구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함.
- 🟡 하지만 최근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⁷⁾ 단 하나의 판결!

7)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그런데, 판례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은 어찌하라고?

-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금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접대 부임을 불고지한 사건. 상해보험 가입 후 일본 동경에서 새벽에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는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⁸⁾
-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 왼쪽 눈 실명사실 불 고지 사건

📢 국회 전문위원(문광섭) 검토 보고서는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함.⁹⁾

8) 만일 위 서태희가 사망 직전에도 계속 접대부로 종사하고 있었다면, 그의 사망사고가 비록 우연한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시각이나 장소 등 특수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접대부의 종사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 위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상의 피보험자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의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9) 나. 검토

□ 그동안 고지의무위반 등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되고 계약해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은 부담하지만 계약해지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등에 의해 가능하다는 해석이 대립되어 왔음.

그러나 살펴건대,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고지의무위반이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650조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위 제655조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언은 본문에 대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 아니하다”로 해석될 뿐 제650조 등에 따른 해지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고지의무위반 등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은 부담하되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현행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의미하는 바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해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